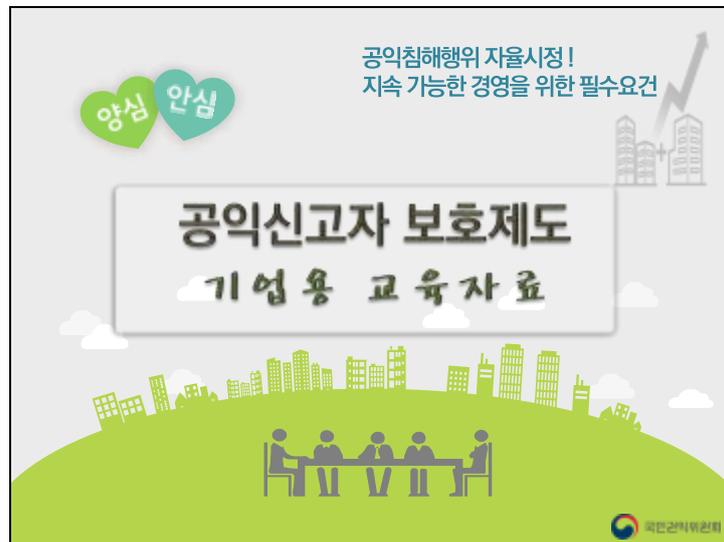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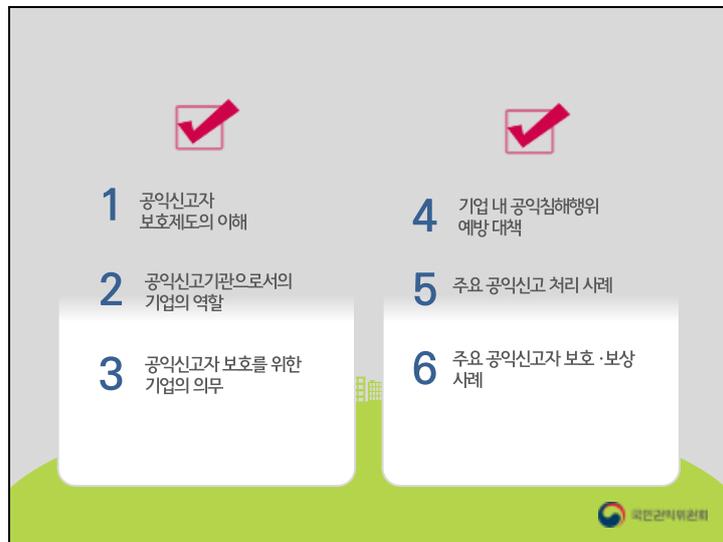
슬라이드 1



민간분야의 각종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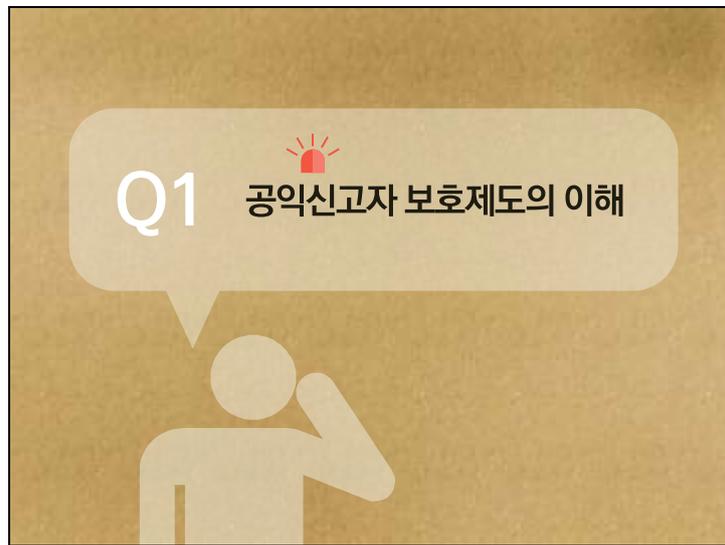
이번 강의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각 기업의 신고자 보호 의식이 한 단계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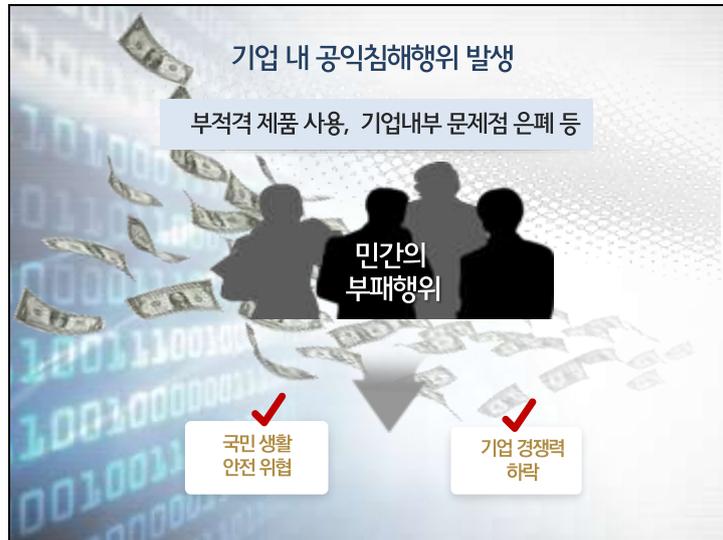
지금부터 공익신고란 무엇인지,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주요 공익신고 처리사례를 알아보며 기업경영에 있어 공익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



첫번째 장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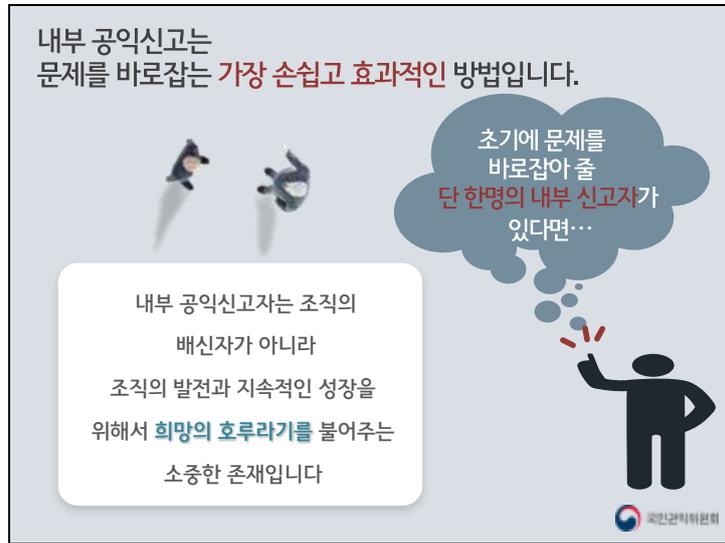
슬라이드 4



우리 사회에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적격제품 사용, 기업 내부 문제점 은폐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부패행위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 하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대한 민간분야의 각종 부패에 대한 예방과 자율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되었습니다.

슬라이드 5



민간의 부패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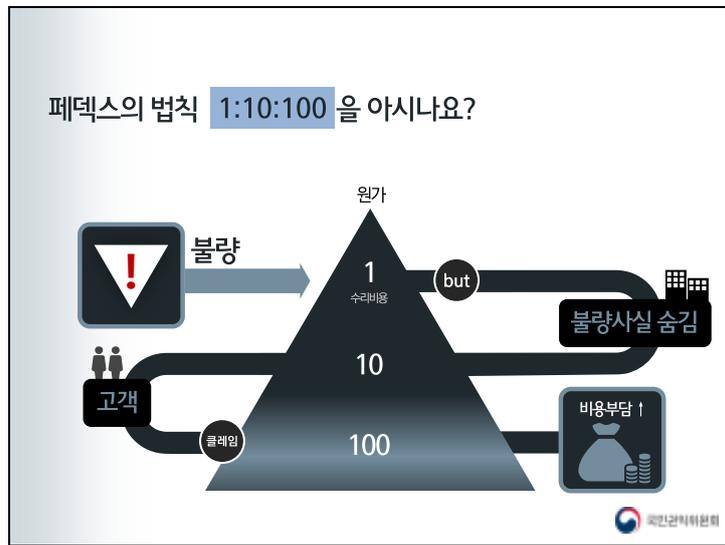
여러분은 내부 신고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직도 내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부 공익신고는 문제를 바로잡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부신고자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조직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희망의 호루라기를 불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업 내에서 희망의 호루라기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6



페덱스의 법칙(1:10:100)을 아시나요? 이법칙은 불량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고치는 데에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소재나 문책 등의 이유로 숨기고 그대로 기업의 문을 나서면 10의 원가가 들며, 이것이 고객의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하여 100의 원가가 든다는 법칙입니다.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줄 내부 고발자가 없다면 기업의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의 외면과 이미지 하락이라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뤄야만 합니다.

슬라이드 7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공익침해행위 279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무면허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유출	 기업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허위 과장광고, 기업간 담합 행위, 불법 산업기술 유출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드 8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기업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를 기업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양심
공익신고

Where?

<p>국민권익위원회</p> <p>279개 공익신고 대상법을 위반행위 신고</p>	<p>수사기관</p> <p>지방경찰서에 영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p>	<p>행정 감독기관</p> <p>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p>
<p>공사 등 공공 단체</p> <p>한국가스 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p>	<p>기업의 대표자· 사용자</p> <p>불법하도급 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p>	<p>국회의원</p> <p>철도 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행위를 신고</p>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공익신고 기관은 다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국회의원 그리고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정당한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양심
공익신고

How?

-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 제 8조 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방법

홈페이지
문서로 신고

우편
FAX

공익신고APP
전화는
상용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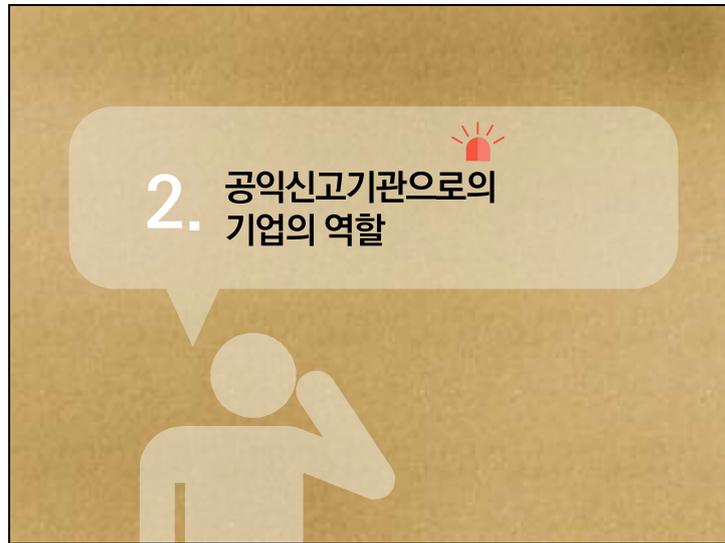
- 기업 내부에서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경우도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익신고는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 내부에서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경우도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공익신고기관으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기업

Role ?

- 기업의 대표자 등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기업이 자율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막대한 비용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기업 이외의 신고기관에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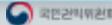
↓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비금전적 손실도 막대함

기업에 신고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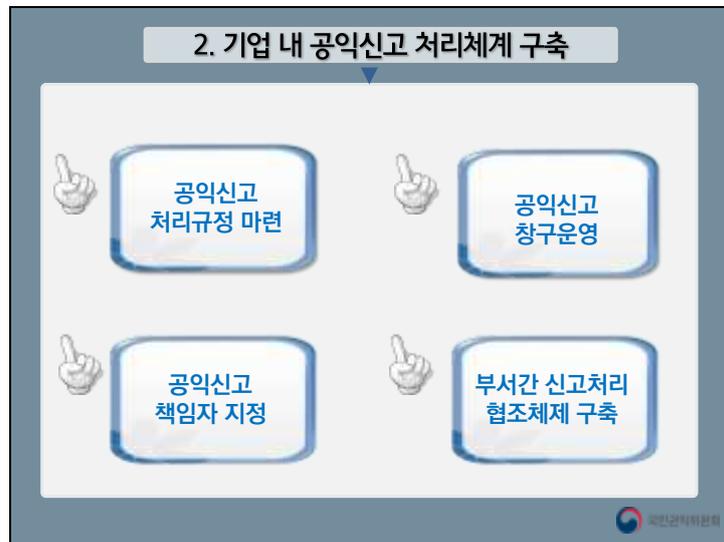
↓

기업 스스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부신고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줄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대표자 등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필요한 경우 기업이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자가 기업에 직접 신고했을 경우 기업 스스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부신고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 신고자 보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전 과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처리규정 마련, 공익신고 창구운영, 공익신고 책임자 지정, 부서 간 긴밀한 신고처리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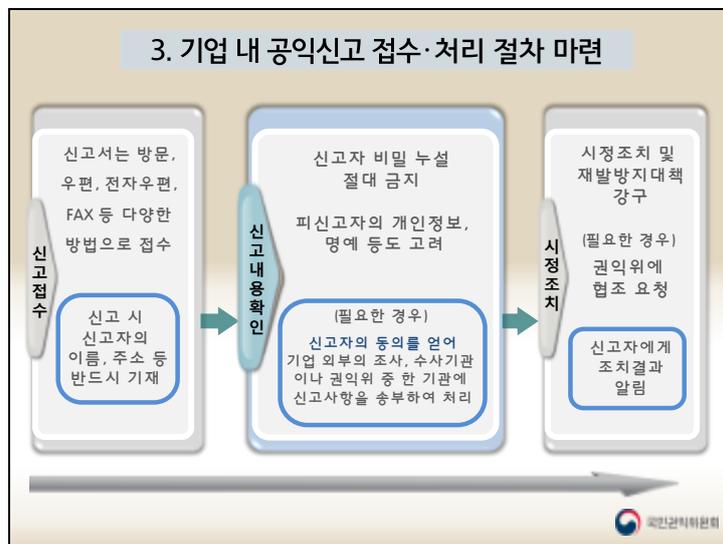
항목별 세부 내용

- 신고 접수방법,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적용, 사규로 이를 구체화
- 기업 내 기존 부서에 설치하거나 기업 외부에 위탁 운영, 기존의 유사한 신고창구 활용 가능
- 공익신고 책임자를 기업 내 최고경영진 수준으로 정함
-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공익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공익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할 때 신고 접수방법,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규로 이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업 내 준법경영팀, 윤리경영팀, 감사팀 등 기존 부서에 설치할 수도 있고, 기업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유사한 신고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창구 운영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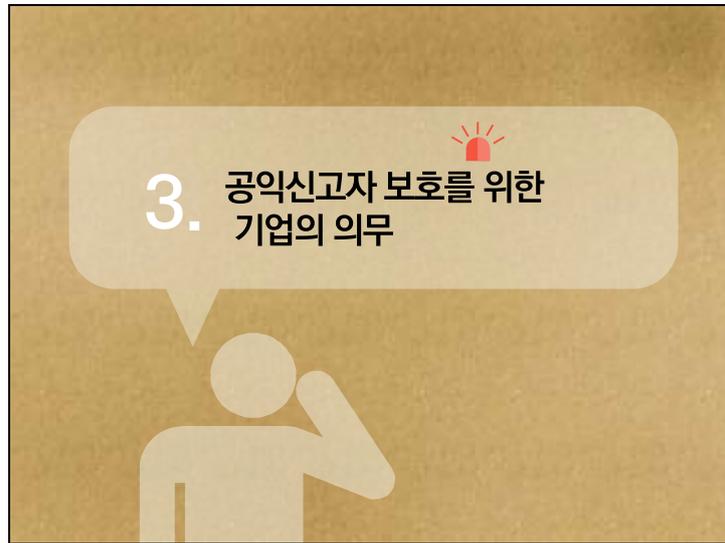
기업 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여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으로서 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자를 기업 내 최고경영진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접수, 조사, 공익침해행위 제거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공익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공익신고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서면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는 방문·사이버신고·우편·전자우편·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법률상의 신고자 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를 위해 신고 시 신고자의 이름, 주소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 외부의 조사·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중 한 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법률위반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의무

안심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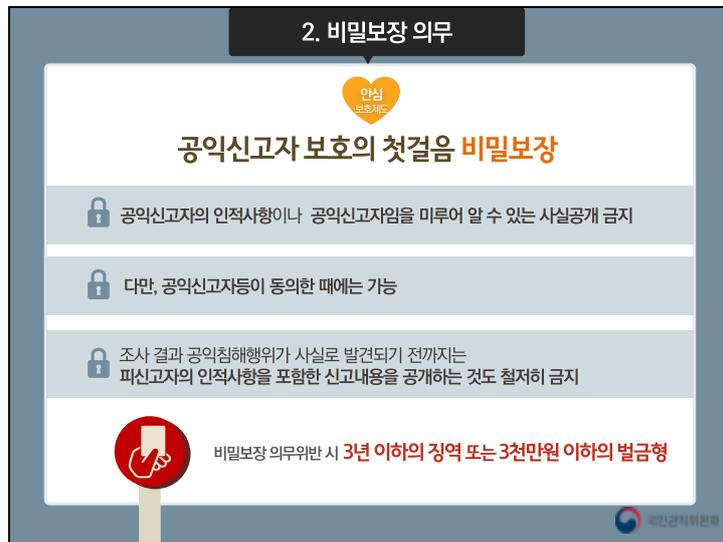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기업에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 부여

- ▶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2항)
- ▶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기업에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보장입니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로 하고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신고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2. 비밀보장 의무

비밀보장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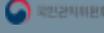
BAD

(사례)

- ▶ ○○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 원무부장의 신고'라는 신고자가 유추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 관련자 징계처분 받음 (mbc, '16.2)

(예시)

- ▶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모래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하청업체 직원이 신고하자,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신고자에게 연락하면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함



그럼 실제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 ○○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 원무부장의 신고'라는 신고자가 유추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 관련자 징계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mbc, '16.2.27)

- ▶ 예를 들어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모래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하청업체 직원이 신고하자,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신고자에게 연락하면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도 비밀보장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신고자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안심
분쟁제도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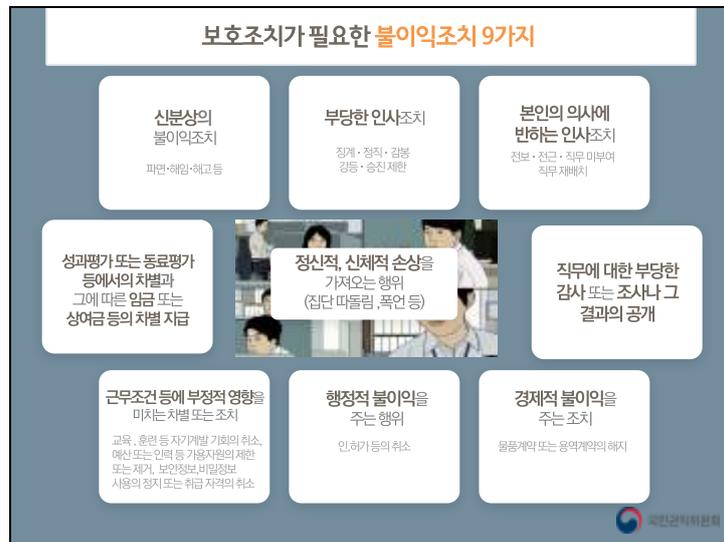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국인권익위원회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 내 신고창구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 이외의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슬라이드 21



직장에서의 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 인·허가 취소, 용역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조치 유형은 다양합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회사 내부의 비리를 신고한 주인공들이 받았던 집단 따돌림, 폭언 등의 정신적 손상 역시 불이익조치의 한 종류입니다. 공익신고로 이러한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권익위는 보호조치를 통해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사례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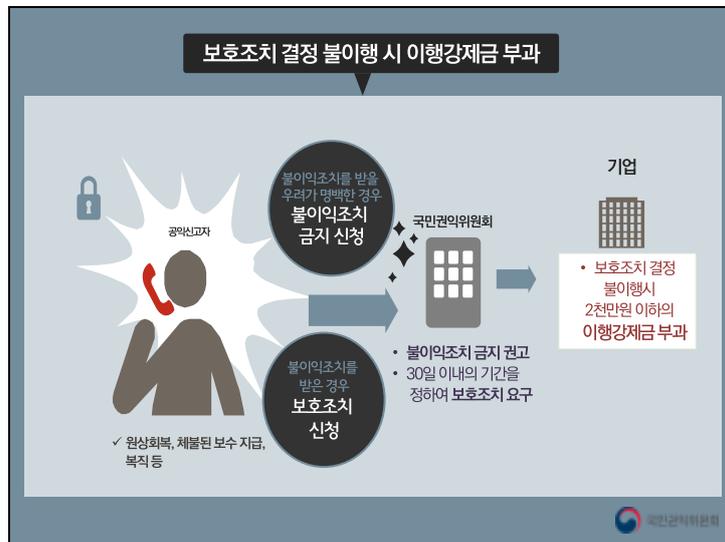
- ▶ A회사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내부 직원이 신고하자, 해당 직원을 출퇴근이 곤란한 무연고 지역으로 전보 조치함
- ▶ ○○금융회사의 불법대출 사실을 알게 된 금융회사 직원이 그 사실을 신고하자, 해당 직원이 회사의 서류를 유출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무기한 정직 처분함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회사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내부 직원이 신고하자, A회사는 해당 직원을 출퇴근이 곤란한 무연고 지역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불법대출 사실을 알게 된 금융회사 직원이 그 사실을 신고하자, 해당 직원이 회사의 서류를 유출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무기한 정직 처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신청을 하면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합니다. 이미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합니다.

기업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익위는 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보호조치 관련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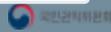
▶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한 A회사 직원이 해임된 것에 대해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 결정을 하자,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A회사가 청구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위원회 승소 판결('15년, 서울고등법원)

* '16.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

판결의의

▶ **공익신고의 요건을 넓게 인정함**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보호조치 관련 주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도 다수 보도된 A회사 직원 해임 관련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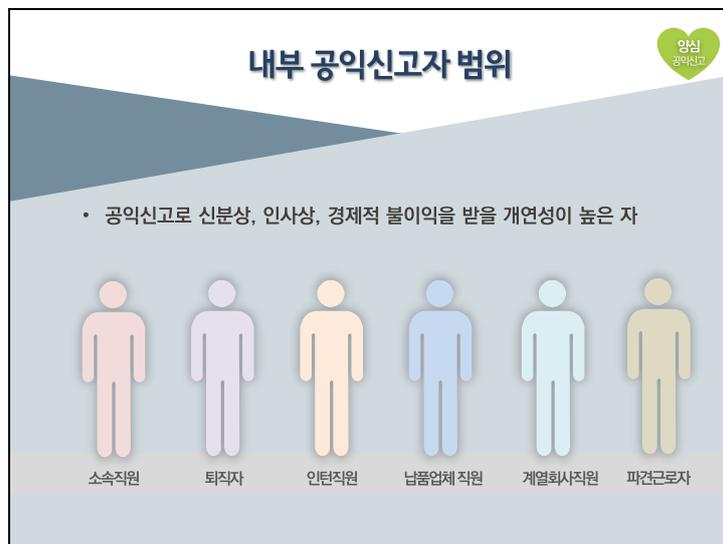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한 A회사 직원이 해임된 것에 대해 권익위가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 결정을 하자,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A회사가 청구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원회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15년, 서울고등법원)

이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넓게 인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 의의가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화투표 부정의혹 관련 공익신고 판례를 통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불이익 조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 조항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느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부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자를 말합니다.

- 근무관계 : 소속근로자, 퇴직직원, 인턴직원 등
- 계약관계 :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 파견근로자 등
- 사실상 영향력 관계 :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
- 지도, 관리 감독관계 : 학생 등

※ 사례

- ① 제약회사에서 영업이사로 퇴직한 사람이 해당 회사가 대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신고
- ② 병원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신고
- ③ 제약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직원이 해당 제약회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신고

양벌 규정 신설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체도 처벌**

* 신고자 보호 규정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보호조치 등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



사업주체의 감독책임을 강화하여 신고자 보호규정의 실효성 강화



앞에서 설명한 비밀보장 의무나 불이익조치 금지 위무, 보호조치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양벌규정 신설에 따라 기업은 신고자 보호 규정이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 보호규정에는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며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인 등 사업주체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신고자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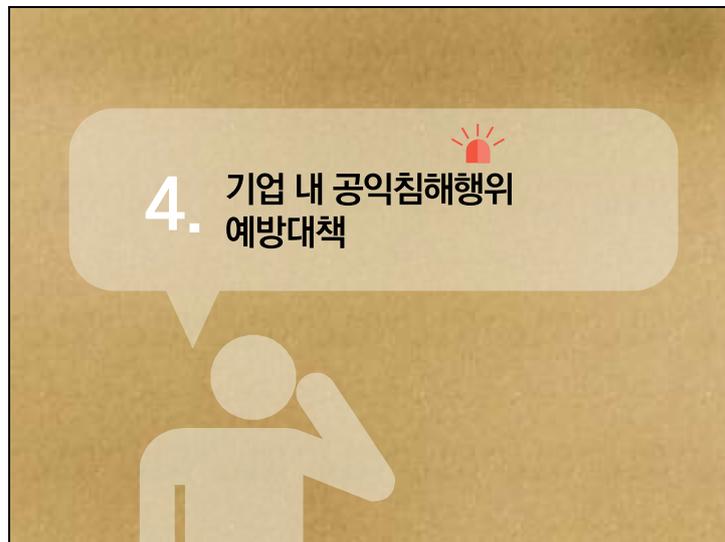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	•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적 고려 (법 제16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14조제3항)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법 제14조제4항)
공익신고 금지 규정 무효 ✓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 (법 제14조제5항)

공익신고 관련하여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4번째 장에서는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공익침해 예방대책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규범마련**
개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
지속적으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개선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교육 및 홍보를 통한 준법의식의 습관화**
내부공익신고의 정당성, 신고채널, 보호내용, 구제절차 등을 숙지토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 및 윤리경영 메시지 전달

명확한 윤리규범은 기업의 공익침해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입니다.

기업은 기업 내의 다양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규범 (행동준칙, 실천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규범 내에 개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도 윤리규범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준법 의식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패행위 예방의 수단으로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내부공익신고의 정당성, 신고채널, 보호내용, 구제절차, 이용방법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공익침해 예방대책

안심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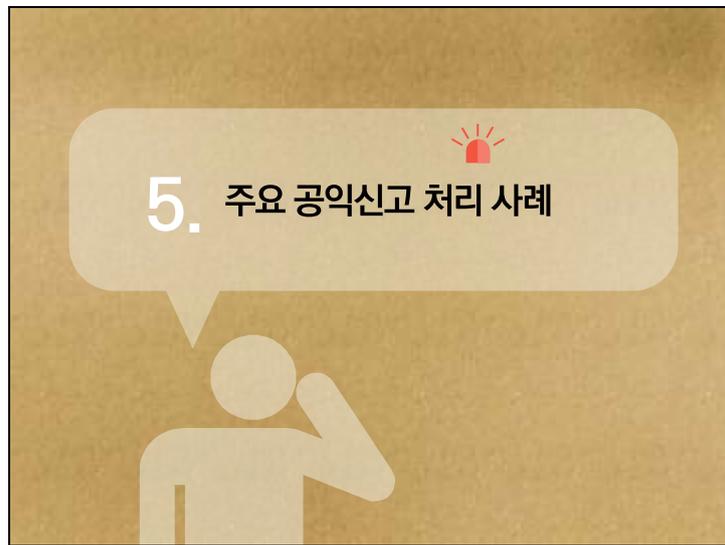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내부 공익신고는 부정부패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내부 신고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4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
기업의 고위 관리자들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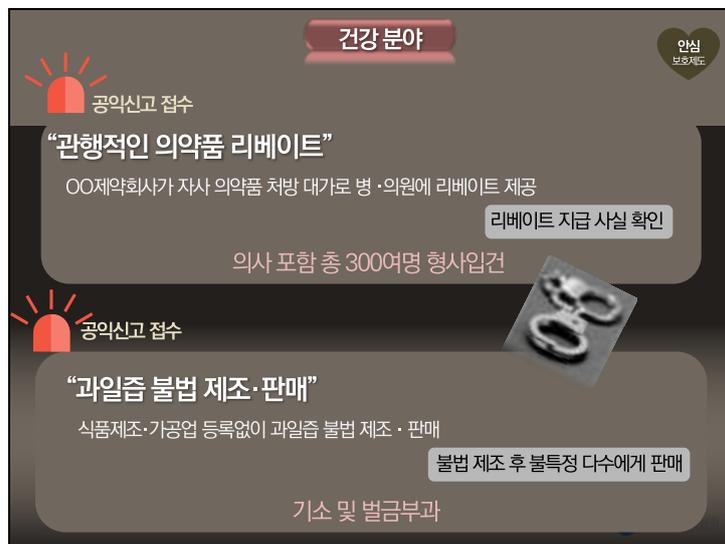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투명성이 훨씬 상승 할 것입니다.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은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고,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문화는 최고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큰바,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고위 관리자들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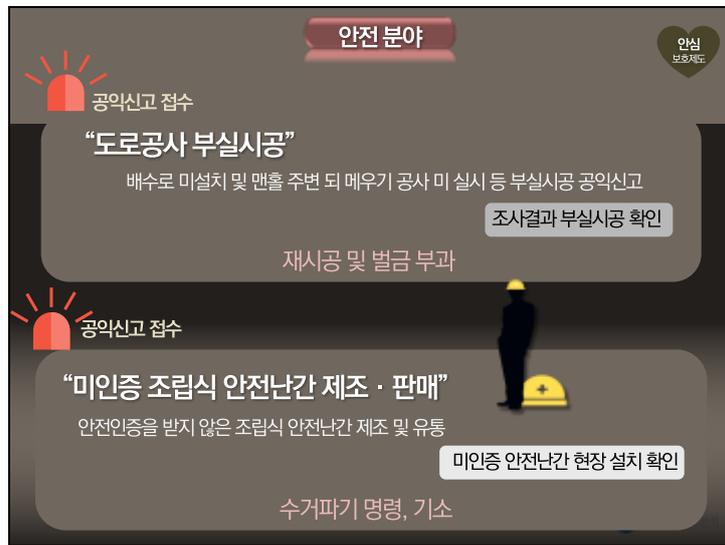
5장에서는 주요 공익신고 처리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입니다.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되어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주유권 또는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에 따라 의사포함 총 300여명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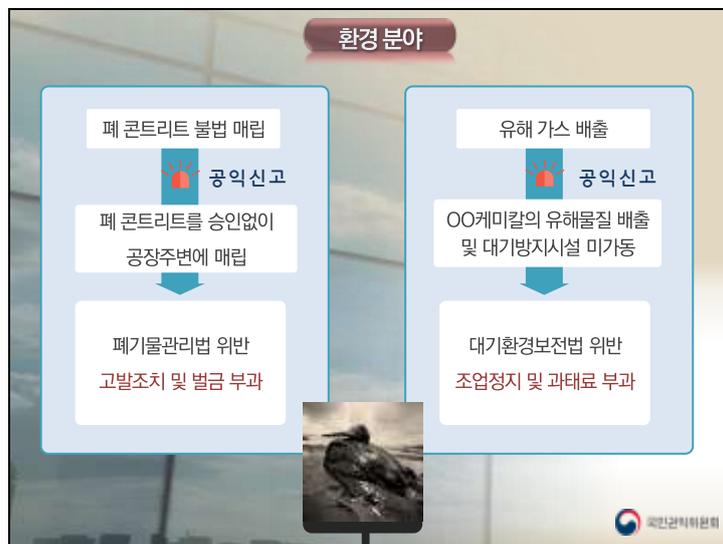
건강을 위해 요즘 많이들 챙겨먹는 과일즙에 대해서도 공익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신고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과일즙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불법 제조 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던 사실을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95조에 따라 기소 및 벌금 부과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실공사 등 안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익신고 사건의 접수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중 ○○시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구간에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및 사석으로 배수로를 마감한 사실, 배수로 규격을 일부 불량하게 시공한 사실, 맨홀을 설치하면서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재시공 및 벌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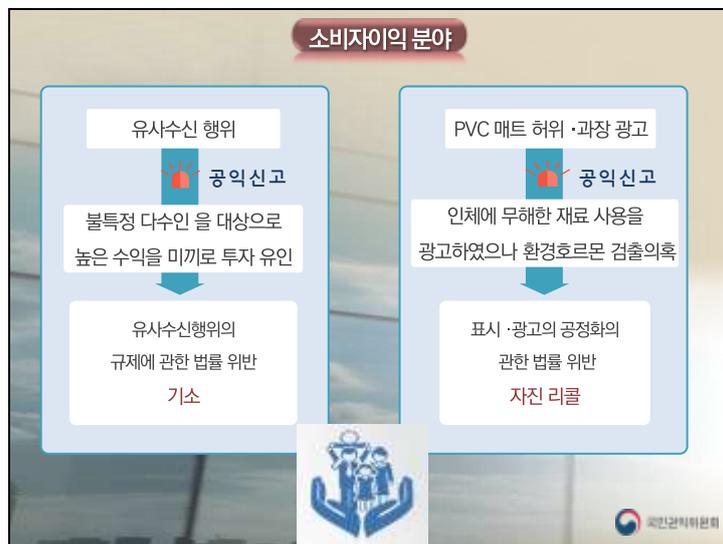
피신고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안전난간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제조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난간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4, 제67조의2에 따라 미인증 안전난간 제조·양도·대여·사용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과 관련자들을 기소를 하였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분야 공익신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자가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사업장 내 OO시설 설치 공사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승인없이 공장 주변에 매립(약 10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에 따라 고발조치 및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OO케미칼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대기방지사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소비자이의 분야는 일반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로 특히 법 개정예 따라 관련법이 가장 많이 추가된 분야입니다.

○○시에 법인을 설립해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공익신고('14년)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에 따라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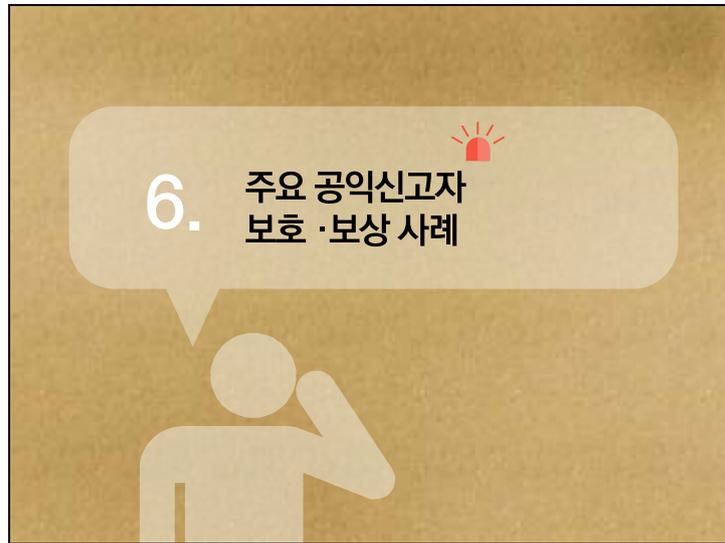
피신고자가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의혹이 있다고 공익신고('15년)가 접수되어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자진 리콜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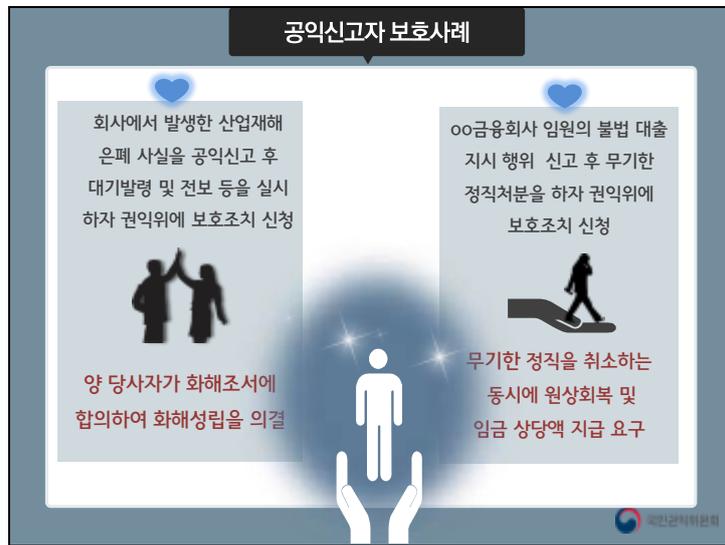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침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막대한 과징금, 과태료 내는 등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에 기업들은 특히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피신고인이 자사 대리점에 가격담합을 지시하는 등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3년)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자사 대리점에 대해 제품 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 지정 등 구속조건 부당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해당업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신고자가 국가산업인 ○○ 관련 기밀자료를 외국회사에 넘겨주었다는 공익신고('14년)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외국의 ○○ 회사에 우리나라 ○○ 제조업체의 기밀자료 등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전동기 결함을 알리기 위해 공익신고를 준비하였다가 해임이나 정직을 당한 직원들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다시 원상회복되는 등 지금까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한 신고자를 구제한 사례는 총 24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핵심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후, 피신고자가 신고자만 대상으로 비정기적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근거로 대기발령 및 전보 등을 실시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 조서내용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가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 임원이 불법대출을 지시한 행위를 검찰에 신고한 후, 이사장이 신고자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해당 정직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징계, 정직, 감봉,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후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기한 정직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위원회의 결정일까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사례

사례 1	사례 2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사실 공익신고	산업재해 발생 신고의무 위반 사실 공익신고
리베이트 제공받은 의사 9명에게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당업체에 과징금 3억 5,920만원 부과
보상금 5,400만원 지급	보상금 4,326만원 지급

법 개정으로 '16. 1월 이후 보상금 지급대상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인 보상금 지원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한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되어 리베이트 제공받은 의사 9명에게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최다 금액 입니다.

두번째 사례 ○○식품가공업체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 근로자를 공무 중 부상으로 처리한 행위를 감사원에 공익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식품가공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9,200만원(1차), 2억6,720만원(2차)이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다만, 조사결과,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4,32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슬라이드 41

구조금 지급 사례

▶ 어린이집의 교직원 허위등록 행위 등을 공익신고한 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과 치료를 받고 사직서 제출 권익위에 치료비 및 임금 손실액에 상당한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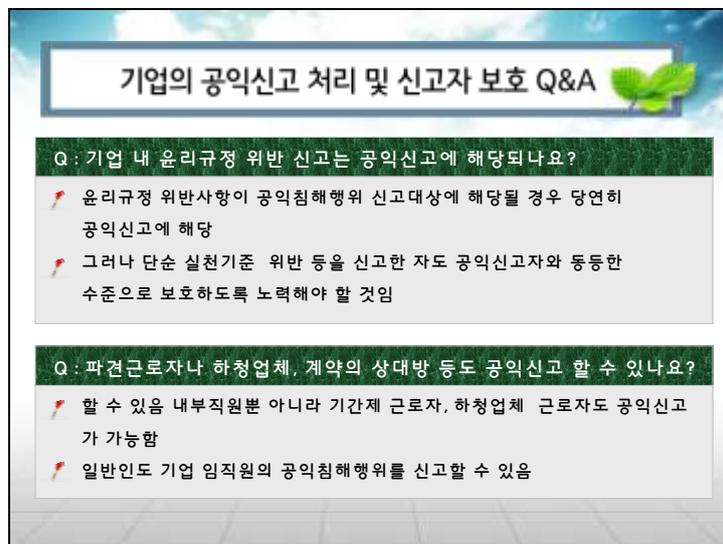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 20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 지출 및 경제적 손해는 공익신고와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치료비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내용) ○○어린이집 직원이 관할 구청에 해당 어린이집의 교직원 허위등록 행위 등을 공익신고한 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악화되어 신경과 치료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권익위에 치료비 및 임금 손실액에 상당한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 지출 및 경제적 손해는 공익신고와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고, 공익신고자를 치료한 주치의에 대한 자문결과, 공익신고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공익신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은 25%로 판단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 20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Q& A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개념을 명확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Q: 기업내 윤리규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되나요?

윤리규정 위반사항이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실천기준 위반 등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파견근로자나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도 공익신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내부직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며, 일반인도 기업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는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The slide is titled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A" (Q&A on Corporate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Reporter Protection). It features two question-and-answer pairs, each with a red lightning bolt icon.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a green leaf icon.

Q: 기업의 비밀도 신고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음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익신고 대상임
-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Q: 기업 내부에 윤리규정과 신고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신고 처리 절차를 신설해야 하나요?

- 각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내부규정이나 신고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해도 됨

Q: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는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Q: 기업 내부에 윤리규정과 신고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신고 처리 절차를 신설해야 하나요?

각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내부규정이나 신고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해도 됩니다.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A

Q : 근무태도 불량이나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자가 회사의 공익침해 행위를 공익신고 했을 경우, 그 신고자를 원상회복 시켜줘야하나요?

▶ 그렇지 않음 신고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히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면, 이는 불이익조치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Q :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 공개해서는 안됨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됨

Q: 근무태도 불량이나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자가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 했을 경우, 그 신고자를 원상회복 시켜줘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히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면, 이는 불이익조치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됨



이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기업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기업 내부의 자율시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46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